
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25. 1. 14.



법무부

순서

2025년 법무부 핵심 추진과제

- ①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1
- ②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·제도 개선 ...4
- ③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6
- ④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8

2025년 법무부 핵심 추진과제

1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

□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

○ 이상동기 강력범죄 대응체계 정비

- ▲ '공공장소 흉기소지죄', '공중협박죄' 등 공중안전 위해사범 처벌 근거 신설*('25.) ▲ 강력범죄 전담검사** 중심으로 경찰과의 수사공조 체계 강화('25.) ▲ 교정시설 이상동기 범죄자 특화 프로그램 실시('25.)

* '24. 10. 송석준 의원 「형법」 개정안 발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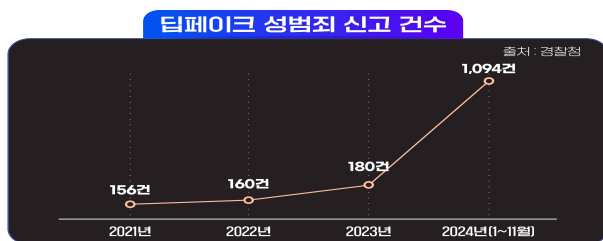
** 전국 60개 검찰청 총 139명의 강력 전담검사 운영 중

○ 디지털성범죄 수사역량 강화

- ▲ 디지털성범죄 국제적 대응을 위해 「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」* 가입을 통한 주요국과의 공조체계 강화('25.) ▲ 여성·아동범죄 수사기능 강화(現여성·아동범죄조사부 12개, '25.) ▲ 사범협조자 형벌 감면, 실시간 인터넷 감청 등 도입**('25.)

* 가입국 간 디지털증거의 신속한 보전과 공유 등 국제공조와 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세계 최초 사이버범죄 협약(76개국 가입) → 이행입법으로 디지털증거 보전 조치를 도입하는 「형사소송법」 개정안(조배숙 의원) 발의('24. 11.)

** '24. 10. 유상범 의원 「성폭력처벌법」, 「청소년성보호법」, 「통신비밀보호법」 개정안 발의



○ 피해자 중심 스토킹범죄 대응

- ▲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해 가할 개연성 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, 구속 수사('25.) ▲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제도* 적극 활용, 수사 초기 신속 지원('25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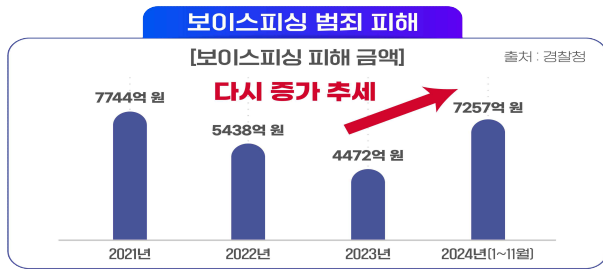
* 피해자의 수사·공판 진술 시 변호사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미선임 시 피해자국선 선정

□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

○ 보이스피싱 · 전세사기 엄단

- ▲ ‘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’, ‘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’ 지속
▲ 전담수사관 파견, 국제형사사법 네트워크* 통한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 검거 · 송환(‘25.) ▲ 대포통장 사용자 금융거래 제한 적극 활용(‘25.)

* 동남아시아 공조기구(SEAJust, 한·중·일, ASEAN 등 총 20개국으로 구성) 등 활용



○ 불법사금융 강력 단속

- ▲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 범죄단체 적극 의율 및 구속 수사(‘25.)
▲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「스토킹처벌법」 상 잠정조치 적극 활용(‘25.)

○ 임금체불사범 근절

- ▲ 악의적 · 상습적 체불사업주 적극 구공판(‘25.) ▲ 상습 고액 체불사업주 재산관계 조사 등 노동청 수사지휘 철저(‘25.) ▲ 체불 사건 전문조정팀* 임금체불 피해 회복 노력 지속(‘25.)

* 전국 23개 검찰청에 노무사, 변호사, 법무사 등 전문가들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「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」 설치 → 체불임금에 전문화된 조정 실시 중

□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

○ 마약유통 등 엄정 단속 및 추적기법 고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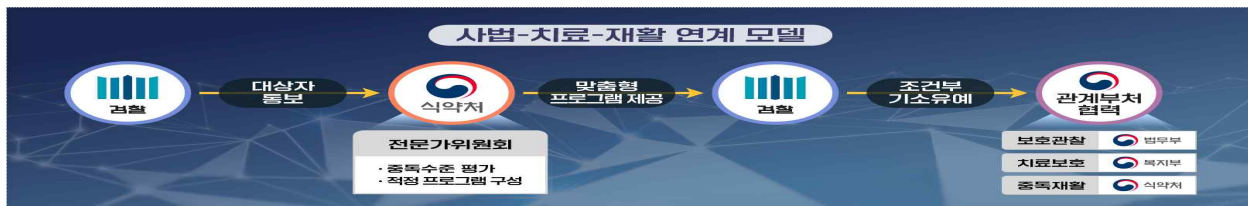
- ▲ ‘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’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속 ▲ ‘다크웹 전문수사팀’, ‘인터넷 마약범죄 수사팀’ 단속 강화(‘25. 상) ▲ 가상 자산 추적 프로그램(리액터) 도입(‘25. 상) 및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 기술* 개발(‘26.) 등으로 마약 배후 총책 검거 및 공급 차단

* ▲ 전신 몽타주 기반 사람 속성 CCTV 인식 ▲ 통제배달 택배 수령, 의심스러운 행동, 마약 던지기 · 전달 행동 자동탐지 ▲ 차량 등 탑승·하차 인식 등 기술

○ 치료·재활을 통한 마약수요 억제

- ▲ ‘사법-치료-재활 연계모델’* 정착 및 내실화('25.) ▲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(現 4곳) 추가 지정('25. 하) 및 재활 수용동 정식 운영 (부산교, '25. 1.) ▲ 재활 전화상담 운영기관 확대 등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('25. 상) ▲ 청소년 및 소년원생 마약류 예방교육 지속('25.)

* 법무부·식약처·복지부 협업, 개인별 중독 수준에 맞는 체계화된 치료·재활 프로그램 제공 및 약물 모니터링을 결합한 모델



○ 국제공조 강화

- ▲ ‘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’*(‘25. 상), ‘아시아·태평양 마약 포렌식 정보공유 네트워크’ 구축('25.) ▲ 제32차 ‘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’ 개최 및 ‘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’ 운영 등으로 국제공조 강화

* 주요 마약 발송국가에 수사관 파견, 국제공조 통해 현지 밀수조직을 적발하는 시스템, '19.부터 태국에 수사관 파견, '25.상반기부터 태국 등 3개국에 추가 파견 예정

□ 시장·경쟁질서 저해사범 엄단

○ 공정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철저 대응

- ▲ 금융위, 금감원과 협력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적극 시행('25. 4. 개정 「자본시장법」 시행) ▲ ‘공정거래조사부’(서울중앙) 중심으로 입찰담합 등 엄단 ▲ ‘국가재정 범죄 합수단’(서울북부) 중심으로 보조금 유용, 조세포탈 등 강력 단속

○ 기술유출범죄 수사 전문성 제고

- ▲ 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관 증원('25. 상) ▲ 법무연수원 수사역량 강화 과정 개설('25. 2.) ▲ 기술유출 사건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는 기술 분쟁조정*,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** 연계 추진('25. 2.)

* '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'에서 당사자 조정 →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

** 중기부 → 대검 기술침해 사건 신고 → 즉시 관할 검찰청 배당 및 수사 착수

2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·제도 개선

□ 재범방지 체계 구축

○ 성폭력·정신질환 등 고위험 범죄자 재범방지 시스템 고도화

- ▲ VR(가상현실)기술 활용 범죄 유형별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('25. 하) ▲ AI 기반 재범징후 감지 등 대응력 강화사업* 추진('25. 하)

*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 등 개발

- ▲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복약검사를 위한 보호관찰소 내 '법화학분석실' 신설('25. 7.) ▲ 보호관찰 청소년 멘토링 및 중독문제 전문가 연계 상담 실시('25.) ▲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 전문인력 증원('25.)



○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전자감독제도 강화 및 확대

- ▲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 등 출입·확인할 수 있도록 「전자장치부착법」 개정('25.) ▲ 특정범죄* 이외 범죄자의 경우에도 치료감호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 가능하도록 「전자장치부착법」 개정('25. 상) ▲ 훼손 방지 성능이 향상된 전자장치 적용 확대('25. 하)

* 성폭력·미성년자대상유괴·살인·강도·스토킹범죄

□ 엄격한 형 집행 및 환수시스템 강화

○ 자유형 미집행자 형 집행 제도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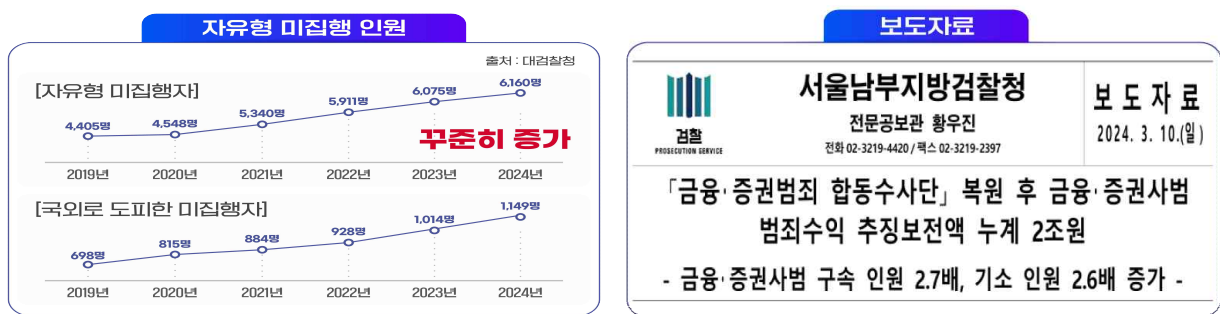
- ▲ 실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소재 파악을 위한 압수수색 도입 「형사소송법」 개정 추진*('25. 하)

* 자유형 미집행자는 '19. 4,405명 → '20. 4,548명 → '21. 5,340명 → '22. 5,911명 → '23. 6,075명 → '24. 6,160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

○ 범죄수익환수 시스템 정비

- ▲ 주요 검찰청 범죄수익환수 기능 강화(現 범죄수익환수부 1개, '25.)
- ▲ 사망 등 기소가 어려운 사안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'독립몰수제'* 도입('25.)
- ▲ 금융정보분석원, '아·태지역 범죄수익 환수 네트워크(ARIN-AP)' 등 국내외 협력 확대로 범죄수익 동결 및 환수 강화('25. 상)

* 22대 국회 '독립몰수' 관련 법안(「형법」, 「범죄수익은닉규제법」 등) 6건 발의



□ 효과적인 범죄 대응 위한 선진 법제 및 인프라 구축

○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

- ▲ 교수·실무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'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'* ('24. 7. 출범) 운영으로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 검토

*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 위원장, 교수 및 판사·검사·변호사 등 실무가 22명 위원 위촉

- ▲ 수사·재판 지연문제 개선 및 신속한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방해죄,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등 도입 검토

○ 효율적 수사·재판을 위한 인프라 마련

- ▲ 법원의 시스템 개통 일정에 맞추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전면 시행 철저 대비('25. 상)
- ▲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약화에 따른 공범 조서 증거능력 개선 및 영상녹화물 본증화 도입 검토('25. 하)

3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

□ 범죄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

○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참여권 보장

- ▲ 살인·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*('25. 상)
- ▲ 재판기록 열람·등사 불허 시 이유 통지 등 피해자 권리 강화**('25. 상)
- ▲ 형사절차정보 피해자 자동통지 등 시스템 개선('25. 상) ▲ 피해자 국선변호사 사건진행내역 조회 기능 강화 형사사법포털 개선('25. 상)

* '24. 7. 김도읍 의원 「특정강력범죄법」 개정안 발의

** '24. 7. 김도읍 의원 「형사소송법」, 「성폭력처벌법」 등 개정안 발의

○ 범죄피해자 보호 실질화 및 통합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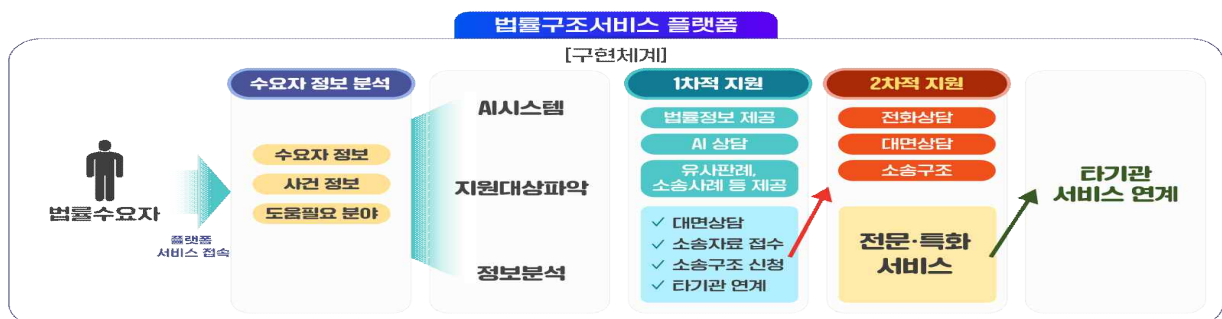
- ▲ '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' 맞춤형 통합지원 시스템 강화('25.)
- ▲ 피해자 직접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구조금 확대('25.) ▲ 고용부와 협의하여 범죄 피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('25. 상)

□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행정

○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

- ▲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플랫폼* 구축('24.~'26.)

* 대법원 법원행정처, 복지부, 금융위,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총 35개 기관 참여, 다수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연계·제공



- ▲ '피의자 장애여부 조사보고서' 공소장 첨부('25. 상) ▲ 기록 열람·등사 시 음성·점자 지원('25. 상) ▲ 발달장애인 형사절차 '안내서' 배포('25. 1.)
- ▲ 소송구조 변호사 연계 등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('25.)

○ 영세사업자를 위한 도산제도 개선

- ▲ 파산채무자의 영업용 필수재산 파산재단 면제 근거 마련 및 중소기업 등 소액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「채무자 회생법」 개정 추진*('25.)

* '24. 9. 박준태 의원 「채무자 회생법」 개정안 발의

○ 검사 공익대표 활동 활성화

- ▲ 한국가정법률상담소, 변호사회, 지자체, 여성·아동보호기관과 협업하여 미성년자·장애인 등 맞춤형 지원('25.) ▲ 친권상실·성년후견 등 전담하는 '공익대표전담팀'* 업무매뉴얼 작성·배포 등 활성화('25. 상)

*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65명, 수사관 66명 지정

□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환경 조성

○ 수용자 의료환경 개선

- ▲ 공공기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 파견('25. 상) ▲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투약이력 조회를 통한 수용자 건강관리 강화('25. 하)

○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노력

- ▲ 교정시설 신축 이전(원주), 수용동 증축(울산, 진주, 군산, 순천, 논산)을 통한 수용 환경 개선('25. 하)

□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증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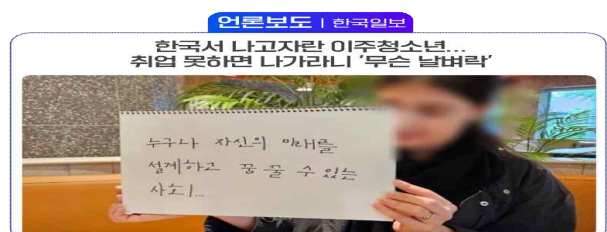
○ 외국인 보호제도 정비

- ▲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마련을 위한 「출입국관리법」 개정('25. 상) ▲ 보호 일시 해제 및 통지 제도 개선('25. 하)

○ 이민 2세대 청소년 및 외국국적동포 정착지원 마련

- ▲ 이민 2세대 청소년 적응·자립 지원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*('25. 상)
▲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및 정착지원 강화('25. 하)

*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구직, 특정활동 등으로 체류 허용



4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

□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

○ 기업환경 개선 및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

- ▲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위한 「상법」 개정 추진('24. 6. 정부안 제출) ▲ 합병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하는 「자본시장법」 개정 추진*('25.)

* '24. 12. 윤한홍 의원 「자본시장법」 개정안 발의

○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

- ▲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* 완수('25. 상)
▲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「공증인법」 및 하위 법령 정비('25. 하)

* ▲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공정증서 작성 및 보관체계 구축 ▲ 전자지갑을 통한 문서 유통 기술 도입 ▲ 지정공증인 신규 지정 및 지정공증인 대상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교육 진행 ▲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전자공증시스템 인식을 제고

□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新 출입국·이민정책 추진

○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

- ▲ 우수인재 유치 위한 '탐티어 비자*', '청년 드림 비자'** 신설('25. 하)
▲ 유학생 졸업 후 구직·취업 연계 강화('25. 상) ▲ 우수인재 안정적 가족 단위 체류 지원 위한 전문인력 등 배우자 취업범위 확대('25. 상)

* 최상위권 대학 출신 AI·양자기술·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해외 고급인재 맞춤형 비자

** 지한(知韓) 그룹 양성을 위하여 한국전 참전국 청년 등에게 한국어·한국문화 연수 및 취업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 프로그램

○ 지역경제 활력 제고

- ▲ 경제계·지자체 수요 반영을 위한 '비자·체류정책 제안제' 본격 시행('25. 하) ▲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운영('25. 3.)
▲ 계절근로제도 운영 지자체에게 선발·교육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 추진 및 통합인력관리 플랫폼 구축('25. 하)

□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무행정

○ 국제법률분쟁 대응 역량 강화

- ▲ 국제투자분쟁(ISDS) 리스크 사전 진단 및 예방 시스템 구축*
- ▲ 국제투자분쟁 발생 시 관계부처와 분쟁대응단 신속 구성·대응**
- ▲ 국제상사분쟁 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「싱가포르조정협약」 이행법률안 국회 제출('25. 하)

* 「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」 책자 발간, 활용 중

** 현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총 7건의 ISDS 진행 중(청구금액 총 약 9.1조)

○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맞춤형 국제소송 지원, 법률자문 제공

- ▲ 법무부의 자체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제소송* 직접 수행, 타부처 및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법률분쟁 시 법률자문 실시 등을 통한 국익·국고 수호 기여

* 법무부 직접 수행 중 국제소송 총 17건, 소가 합계 약 3.2조



○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

- ▲ 전자입국신고서 도입('25. 상) ▲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한시 면제 연장(~'25. 12.) ▲ 중국·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(~'25. 12.) ▲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*('25. 상)

*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 확대, 간병인 허용인원 확대 등

- ▲ 제주 크루즈 전용터미널 자동심사대 도입*('25. 하) ▲ 중국인 크루즈 단체관광객 선사 모객 허용 시범사업 시행**('25. 1.)

* '25. 52.5억 예산 확보, 총 38대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예정

** 중국인 관광상륙허가 대상: (기존) 전담여행사 모객 + (추가) 선사 모객